



2017. 2. 21 (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제2차 회의자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2차 회의 개최

□ 개 요

- 기 관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 때 · 곳 : '17. 2. 21(火) 11:00 ~ 12:00 /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 참 석 : 30명 (연구모임 회원 19, 직원 등 기타 11)
- 회의내용

보고 2017-2-1호) 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회의 2017-2-1호) 축산 관련 현황분석 결과

회의 2017-2-2호) 무허가축사 관련 질의응답 및 조례 개정 현황

회의 2017-2-3호) 향후 일정 관련

□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진행 방법	비 고
11:00 ~ 11:05	5'	▶ 인사말씀		김응규 도의원 (연구모임 대표)
11:05 ~ 11:25	20'	▶ 주요내용 발표	발표	이상준 (연구모임 간사)
11:25 ~ 11:55	30'	▶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	토론·협의	연구모임 구성원
11:55 ~ 12:00	5'	▶ 마무리 말씀		이성일 팀장
12:00 ~		▶ 만찬		

□ 주요 회의 안건

(1) 보고2017-2-1호(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 1차 회의결과 종합

(2) 회의2017-2-1호(축산 관련 현황분석 결과)

- 15개 시·군 축종별 무허가 축사 현황
- 무허가축사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현황

(3) 회의2017-2-2호(무허가축사 관련 질의응답 및 조례 개정 현황)

-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상 중요사항
-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사례집 상 중요사항

(4) 회의2017-2-3호(향후 일정 관련)

- 현장방문 일정
- 워크숍 추진 일정

□ 회의개요

- 일 시 : 2016년 11월 7일(월) / 17:00~18:00
- 장 소 : 아산시청 별관 1층 회의실
- 참 석 자 : 김응규 의원님 외 17명

□ 회의내용

- 무허가 축사 관련 내용 종합
 - 무허가 축사는 소규모로 자본력 등이 부족함
 - 아산시 등에서 무허가 축사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산림 지역 내 무허가축사는 ‘산지관리법’ 상 기준에 적합하면 구제 가능
(무허가 축사에 한해 7년이 지나면 복구비 면제 등)
 - 건축법 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나 국토부 등과 협의 필요
 - 9,400여개 무허가 축사가 있으며 이 중 187여개가 적법화 됨
 -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아산시와 같은 조례의 개정 등도 필요함
- 무허가 축사 관련 문제점 사례
 - 축사 등이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하는 사례와 관련된 문제
 - 축사와 대지 경계선 간 이격 거리 문제(면 지역 2m, 읍 지역 4m)
 - 건폐율 초과 문제
 - 건물을 이어 붙여 사용하는 문제
 - 창고로 허가 받고 축사로 활용하는 문제
 - 환경문제(특히 분뇨처리시설 문제)와 양돈, 양계 문제 해결 필요
 - 악취 문제 해결 필요

[회의2017-2-1-1호] 15개 시·군 축종별 무허가 축사 현황

□ 무허가축사 및 적법화 추진 현황

○ 충남도 내 축사는 16,926개소이며 이 중 무허가축사는 9,461개소로 전체의 55.9%로 나타남

- 현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는 총 4,095개소이며, 완료된 것은 186개소로 전체의 2.0%에 수준에 불과함

구 분	축사 및 무허가축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비고
	축사	무허가축사		상담	추진중	완료	추진율	
		개소	비율(%)					
계	16,926	9,461	55.9%	4,095	740	186	2.0%	
천안시	778	492	63.2%	78	117	11	2.2%	
공주시	2,367	1,164	49.2%	505	10	3	0.3%	
보령시	1,146	675	58.9%	600	60	13	1.9%	
아산시	724	567	78.3%	100	1	1	0.2%	
서산시	1,245	624	50.1%	500	30	0	0.0%	
논산시	1,012	458	45.3%	450	10	9	2.0%	
계룡시	23	10	43.5%	7	3	0	0.0%	
당진시	1,385	904	65.3%	162	14	37	4.1%	
금산군	385	183	47.5%	283	180	3	1.6%	
부여군	1,345	689	51.2%	200	10	4	0.6%	
서천군	506	215	42.5%	80	15	4	1.9%	
청양군	1,176	522	44.4%	170	80	2	0.4%	
홍성군	2,550	1,634	64.1%	260	50	69	4.2%	
예산군	1,766	1,025	58.0%	600	100	30	2.9%	
태안군	518	299	57.7%	100	60	0	0.0%	

출처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식 및 제1차 회의자료, 2016, pp.9~10. 재구성

□ 무허가 축산농가 현황

- 무허가 축산농가 현황은, 2016년 기준 약 6,256호로 분석됨
 - 축산 농가는 총 18,528호로, 이 중 소와 관련된 축산농가가 15,531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무허가 농가는 총 6,256호로 전체 축산농가의 33.8%로 분석됨

구분	총계	소			돼지	닭		
		소계	한육우	젖소		소계	산란	육계
축산농가	18,528	15,531	14,360	1,171	1,176	1,821	837	984
무허가 농가	6,256	5,781	5,285	496	265	210	63	147
비율	33.8%	37.2%	36.8%	42.4%	22.5%	11.5%	7.5%	14.9%

출처 : 충청남도 축산과, 축종별 무허가 축산농가 현황, 2016.8월 말, 내부자료

주1 : 축산농가는 2016년 상반기 행정통계 기준

주2 : 무허가농가는 214년 7월 추정 조사 자료

- 연령별 축산농가 현황을 살펴보면, 50대~60대 농가주가 가장 많은 편임
 - 50대~60대 농가주는 총 12,320호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고 있음
 - 축종별로는 한육우가 사육농가수는 8,949로 가장 많지만, 농가비율로는 젖소가 7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농가(호)	18,522	105	637	1,814	5,919	6,401	3,050	596
	비율	100.0%	0.6%	3.4%	9.8%	32.0%	34.6%	16.5%	3.2%
한육우	농가(호)	13,587	56	377	1,252	4,100	4,849	2,447	506
	비율	100.0%	0.4%	2.8%	9.2%	30.2%	35.7%	18.0%	3.7%
젖소	농가(호)	1,065	16	71	107	460	355	54	2
	비율	100.0%	1.5%	6.7%	10.0%	43.2%	33.3%	5.1%	0.2%
돼지	농가(호)	1,170	22	79	152	447	367	97	6
	비율	100.0%	1.9%	6.8%	13.0%	38.2%	31.4%	8.3%	0.5%
닭	농가(호)	2,700	11	110	303	912	830	452	82
	비율	100.0%	0.4%	4.1%	11.2%	33.8%	30.7%	16.7%	3.0%

출처 : 충청남도 축산과, 연령별 축산농가 현황, 2016.8월 말, 내부자료

- 축종별 축산농가 현황에서, 한육우가 14,360호로 전체의 64.1%를 차지함
 - 마리 수 기준으로는 닭이 45,531,700마리로 전체의 94.4%를 차지함
- 농가 당 사육 수는 한육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됨
 - 한육우는 사육 농가수는 많지만, 농가마다 사육하는 양이 적기 때문임
 - 반면, 돼지와 닭은 농가 당 사육하는 돼지와 닭의 수가 높기 때문임
- 시·군별로 살펴보면, 농가는 홍성군, 사육수는 당진시가 가장 많이 나타남
 - 홍성군은 한육우 사육 농가수 가장 많으며, 홍성군 기준 69.8%, 충남 기준 14.3%를 차지함
 - 당진시는 닭의 사육수가 가장 많으며, 당진시 기준 93.6%, 충남 기준 12.1%를 사육하고 있음

구분	합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농가 (호)	마리수 (마리)	농가 (호)	마리수 (마리)	농가 (호)	마리 수 (마리)	농가 (호)	마리수 (마리)	농가 (호)	마리수 (마리)
합계	22,407	48,254,348	14,360	361,394	1,171	69,654	1,176	2,291,600	5,700	45,531,700
천안시	1,126	5,653,989	560	16,759	205	13,230	87	230,000	274	5,394,000
공주시	2,638	3,072,798	2,015	47,394	54	3,404	55	118,000	514	2,904,000
보령시	1,453	3,309,917	892	23,624	57	4,293	104	263,000	400	3,019,000
아산시	1,094	5,263,614	642	17,641	218	8,973	87	146,000	147	5,091,000
서산시	1,698	1,690,684	1,105	30,797	54	2,887	42	62,000	497	1,595,000
논산시	1,256	4,692,576	849	23,335	68	3,241	100	178,000	239	4,488,000
계룡시	44	1,661	19	361			1	600	24	700
당진시	2,017	5,866,891	1,197	30,954	138	11,937	165	330,000	517	5,494,000
금산군	663	880,570	250	7,721	16	1,849	20	26,000	377	845,000
부여군	1,854	4,811,034	1,149	25,501	68	2,533	36	105,000	601	4,678,000
서천군	959	2,292,162	453	11,812	16	1,350	18	24,000	472	2,255,000
청양군	1,581	2,764,690	1,138	20,103	15	587	39	55,000	389	2,689,000
홍성군	2,944	4,367,402	2,054	50,474	69	3,928	314	539,000	507	3,774,000
예산군	2,260	3,124,650	1,657	46,265	147	9,385	101	206,000	355	2,863,000
태안군	820	461,710	380	8,653	46	2,057	7	9,000	387	442,000
평균	1,494	3,216,957	957	24,093	84	4,975	78	152,773	380	3,035,447
농가 당 사육수 (마리)		2,153.5		25.2		59.5		1,948.6		7,988.0

출처 : 충청남도 축산과, 축종별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 2016.8월 말, 내부자료

[회의2017-2-1-2호] 무허가축사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현황

□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 2014년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이전에는 227건에 불과하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2014년 이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도 2014년 이전에 비해 이후가 210건 정도 증가하였음
 - 시·군별로는 당진시가 110건, 홍성군이 38건, 천안시가 32건 증가하였음
 - 반면에, 서산시 30건, 서천군은 5건, 보령시·아산시 4건씩 감소하였음
- 부과금액도 2014년 이전에는 522,438천원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이후에는 932,033천원으로, 409,595천원이 증가하였음
 - 건당 부과금액도 건당 2,872천원에서 3,229천원으로 증가하였음

구분	합계		2014년 이전		2014년 이후		증감		부과건수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이전	2014년 이후
합계	664	1,454,471	227	522,438	437	932,033	210	409,595	2,872	3,229
천안시	44	93,848	6	36,743	38	57,105	32	20,362	6,124	1,503
공주시	70	86,243	24	24,352	46	61,891	22	37,539	1,015	1,345
보령시	38	120,450	21	45,008	17	75,442	-4	30,434	2,143	4,438
아산시	26	191,583	15	45,132	11	146,451	-4	101,319	3,009	13,314
서산시	66	97,446	48	77,372	18	20,075	-30	-57,297	1,612	1,115
논산시	21	25,818	2	1,854	19	23,964	17	22,110	927	1,261
계룡시	7	2,260	4	1,312	3	948	-1	-364	328	316
당진시	160	179,231	25	100,789	135	78,442	110	-22,347	4,032	581
금산군	4	4,369	3	4,146	1	223	-2	-3,923	1,382	223
부여군	15	43,357	2	2,862	13	40,495	11	37,633	1,431	3,115
서천군	7	75,467	6	67,848	1	7,619	-5	-60,229	11,308	7,619
청양군	30	182,977	10	31,990	20	150,987	10	118,997	3,199	7,549
홍성군	150	263,340	56	70,826	94	192,514	38	121,688	1,265	2,048
예산군	25	87,862	5	12,205	20	75,657	15	63,452	2,441	3,783
태안군	1	221	0	0	1	221	1	221		221

출처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2016.8.22, 내부자료

□ 미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고발 현황

- 2010년 이후 미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고발은 총 254건이 이루어짐
 -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45건으로 가장 많으며, 보령시는 1건으로 가장 적음
- 2014년 이전에는 총 152건이며, 2014년 이후에는 102건으로 50건이 감소함
 - 시·군별로는 논산시의 감소폭이 35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천안시가 21건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청양군 6건, 금산군 5건, 공주시 4건 등 8개 시·군에서는 적지만 고발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구분	합계	2014년 이전	2014년 이후	증감
합계	254	152	102	-50
천안시	45	33	12	-21
공주시	6	1	5	4
보령시	1	0	1	1
아산시	24	15	9	-6
서산시	21	9	12	3
논산시	47	41	6	-35
계룡시	2	2	0	-2
당진시	31	18	13	-5
금산군	5	0	5	5
부여군	24	13	11	-2
서천군	7	2	5	3
청양군	10	2	8	6
홍성군	16	12	4	-8
예산군	2	0	2	2
태안군	13	4	9	5

출처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미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고발 건수 현황, 2016.8.24, 내부자료

□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점

정부 차원의 문제점

- 제도개선 미비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환경부 규제 강화
 -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행정처분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폐쇄·가축사육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구성됨

농가 차원의 문제점

- 비용 문제
 - 측량비,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적법화 추진 비용
 - 농가 당 약 500백만원 소요 예상
-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적용 등 문제
 - 지적도 상 타인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문제
 - 건폐율(60%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문제
- 지역사회 이해, 농가 간 형평성 문제
 - 지역 사회에서의 축사 확장에 대한 반대
 -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한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

□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상담 사례

(※ 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 2016 발췌)

(1)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 건축허가와 신고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건축신고 대상 : 연면적 400㎡ 초과, 증축된 바닥면적 85㎡ 미만
 - 건축허가 대상 : 연면적 400㎡ 미만, 증축된 바닥면적 85㎡ 초과
- 용도 불일치 문제
 - 퇴비사 → 축사, 가축용 창고 → 퇴비사로 사용할 경우, 전자는 신고대상, 후자는 허가대상임
- 소유주 불일치 문제
 - 타인의 토지에 축사를 운영할 경우, '대지사용승낙서' 징구 필요
- 토지 경계 침범 문제
 - 축사 부지경계선이 하천부지를 침범한 경우, 축사가 건축허가가 난 상태라면, 하천점용도 인정됨(건축법 제11조제5항10호 참조)

(2) 가축분뇨 배출시설(변경)허가/신고 관련

- 배출신고 대상과 관련된 문제
 - 한우의 경우 100㎡(약 10마리)은 배출신고 대상이 아님
 - 소→돼지로 축종 변경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임
 - 한우축사 10동 3,300㎡(1동 400㎡ 이하)는, 동별 면적이 400㎡ 이하로 건축신고 대상이며, 축사 면적이 3,000㎡ 이상으로 배출시설 허가대상임
- 주민동의서 관련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시 주민동의서 첨부 필수
- 사슴과 관련된 문제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2007년)에 의거 다른 축종과 같이 적용됨

(3) 건폐율 초과 관련

- 건폐율이 초과한 부지
 - 건폐율이 초과한 부지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축사를 폐쇄하여 해결
- 축사가 2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 2필지 이상을 합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건폐율 산정
- 타인 토지를 침범한 문제
 -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타인 토지를 일부 매입하거나, 침범 축사 제거
-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건폐율 문제
 - 당초 용도(농림지역)에서 건폐율 60%를 적용받았으나, 용도 변경(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40%로 변경된 경우, 당초 건축허가 부분은 인정되나, 용도 변경 후 증축된 부분은 현 건폐율 40% 적용

(4)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관련

- 가축사육제한구역 선정 이전 축사 문제
 - 가축분뇨법 부칙8조에 따라, 동 법 시행 후 3년 동안 배출시설을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음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조치 명령 가능 여부
 - 지역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고 일정한 보상이 필요함

(5) 가설건축물 축사 관련

- 비닐하우스 축사도 가설건축물 대상인지 여부
 - 축사용 비닐하우스도 가설건축물 대상이며, 연면적 100㎡ 이상이면 간이축사로 축조신고 가능, 건폐율에 미포함
- 축사 가설건축물 대상 여부
 - 축사용 가설건축물은 지붕과 벽의 재질이 비닐하우스, 천막, 합성수지, 1/2이하 합성강판(지붕)의 경우에만 인정
 - 컨테이너는 간이축사로 신고가 불가능하지만, 가축양육시설일 경우는 가능함

(6)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 소규모 축사의 퇴비사 설치 문제
 - 소규모도 퇴비사는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전량 위탁처리 시는 불필요함
- 퇴비사의 건폐율 산정 문제
 - 퇴비사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건축대장에는 등재(연면적과 바닥면적 유효)
- 공동 퇴비사 설치 문제
 - 소규모 축사가 모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함

(7) 이행강제금 관련

- 조례를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율 적용 가능성
 - 지자체 조례로 최대 60/100까지 낮출 수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 이행강제금이 먼저 나온 경우 자진신고서 제출 필요
 -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 1~2회 정도 부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부과횟수는 5회를 넘지 않음)
 - 가설건축물도 이행강제금 대상임
 - 축사와 축사 사이 지붕연결 부분도 이행강제금 대상임

(8) 축사차양 및 축사 간 지붕연결 문제

- 건축면적 포함 문제
 - 축사 연결부분은 6m까지 건폐율에서 제외(바닥면적과 연면적에 포함)
- 가설건축물 유무
 - 축사가 일반건축물일 경우 연결부분도 일반건축물임
- 축사 처마의 대지경계선 침범 문제
 - 축사 처마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을 침범한 경우, 침범한 부분만큼 끊어내야 함

(9)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문제

○ 농장이 도로에 접하는 기준

-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물리지 않아도 되나, 건축조례로 지정하는 크기 이상의 축사는 6m 도로에 4m 이상 물려야 함

(10) 대지안의 공지(이격거리 문제) 문제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 부지경계선 이격거리 문제

- 축사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1m~6m,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6m의 범위에서 지역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허가축사 1동과 무허가축사 1동의 과거 법에 따른 이격거리 문제

- 허가축사 1동이 당시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한 건물일 경우, 이격거리 강화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물임
- 단, 무허가축사 1동은 당시 건축법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양성화를 위한 이격거리를 적용함

(11) 적법화시 개발행위 허가 문제

○ 축사 적법화 과정 상의 개발행위허가 문제(토지 660㎡ 이상 형질변경 시 심의료 1천만원 이상 소요)

- 건축허가, 토지 형질변경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무허가축사 관련 시·군별 무허가축사 관련 건축조례 개정 현황

- 무허가축사에 대부분 이격거리 조정, 이행강제금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태안군의 경우, 측량비 및 설계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비 50백만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수립됨
- 이격거리 조정은 공지 이격거리를 0.5m~1.0m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시함
- 이행강제금 조정은 시·군별로 차이가 큰 편인데, 평균적으로 현행 이행강제금의 60~7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이격거리 조정	이행강제금 조정	측량비 및 설계비 지원
천안시	▪ 5m ⇒ 1.5m		
공주시	▪ 5m ⇒ 0.5m		
보령시	▪ 5m ⇒ 0.5m	▪ 70%~100% ⇒ 60%	
아산시	▪ 5m ⇒ 1.0m	▪ 70%~100% ▪ ⇒ 항목별 10% 경감	
서산시	▪ 3m ⇒ 1.0m	▪ 용적률 초과 70% ▪ 그 외 60%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 1~6m ⇒ 1.0m		
금산군		▪ 건폐율 초과 80 ⇒ 70% ▪ 용적률 초과 90 ⇒ 80% ▪ 무허가100 ⇒ 80% ▪ 미신고 70 ⇒ 60%	
부여군	▪ 3m ⇒ 1.0m		
서천군			
청양군	▪ 1.0m		
홍성군	▪ 5m ⇒ 0.5m		
예산군			
태안군			▪ 농가당 최대 1천만원 ▪ 총예산 1억원(군:자부담=5:5)

출처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식 및 제1차 회의자료, 2016, p.11. 재구성

□ 3차 정례회의 개최

- 일시 : 2017년 2월 경 추진
- 내용 : 전문가 초청 교육 방안 협의 등

□ 정책토론회 개최

○ 전문가 초청 교육

- 일시 : 2017년 3월 경 추진
- 내용 :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준에 대한 상세설명 등
- 대상 : 축산환경관리원 관련 전문가 대상

○ 정책 토론회

- 일시 : 2017년 7월 경 추진
- 내용 : 전문가 및 도민, 축산농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대상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방안, 악취 등 축사환경개선 방안 등

□ 무허가축사 실태 파악

○ 현황분석

- 선행연구, 통계자료 등 지속적인 조사 및 분석
- 간사를 맡은 충남연구원에서 충남도 등과 협의하여 추진

○ 현장방문

- 일시 : 2017년 5월 경 추진 예정
- 대상 :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내 축사

※ 정확한 세부 일정과 장소는 미정으로,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

□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
대표	김응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연구간사	이상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회원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송덕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정규재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장	
	오형수	충청남도 축산과장	
	김기웅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장	
	이원행	충청남도 산림복지과장	
	백충현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장	
	신우식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김경태	한돈협회 아산지부장	
	서석천	두원농장 대표	
	지덕환	덕환농장 대표	
	홍성학	계림농장 대표	
	강정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 본부장	
기타	유예나	충남연구원 연구원	